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역사나눔2-1

재일동포사회의 민주화운동

손형근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민족의 분단으로 남북 민중은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갖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재일동포는 일본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고난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이면서 아직도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 배타정책으로 동화 귀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재일동포가 민족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일제는 우리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 황민화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오늘날도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동화·귀화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재일동포는 분단으로 인한 동포사회 분열, 일본정부의 차별 배타정책, 우리정부의 기민화정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한통련의 전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 4월혁명은 재일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까지 독재정권의 간섭으로 자율적 행동이 제약되어온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5월에 ‘제3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재일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자치단체로서의 본래의 성격으로 돌아가 ‘본국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 대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의 지시로 반공우익단체의 색채가 강했던 ‘대한청년단’이 4월혁명정신에 따라 발본적으로 개편되어 민주화와 통일의 선봉대로서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사태는 달라집니다. 민단중앙집행부는 즉각 쿠데타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제3선언’에서 밝힌 자주적 입장을 포기하고 군사독재정권 전면적 추종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입니다. 군사쿠데타를 반대하는 민단 내 민주세력은 민단중앙집행부의 추종 노선에 반대하여 민단민주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됩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한청 등 민단내 양심적 인사 등 민주세력은 한일회담 조기 타결 반대운동, 외국인학교법안 반대운동, 입관법 개악반대운동 등 재일동포의 민족적·민주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권연명을 위해 일본정부와 유착하고 재일동포를 무권리상태로 방치하는 본국의 독재정권하에서는 재일동포의 생활이나 인권, 민족적 권리를 옹호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72년 7월 민단 중앙집행부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민단 민주인사들의 제명처분과 한청 등에 대한 산하단체 취소 처분 등을 강행 체결하여 사실상 민단민주화세력을 추방하는 조치

를 취했습니다.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맞서면서, 재일동포의 권익 수호와 독재정권에 추종하는 민단을 민주화하기 위해 운동해온 민주세력이 독재정권과 직접 대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민단민주세력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동포대중을 계몽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단·총련, 한청·조청의 공동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외에 앞서 모범적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일본의 동화·귀화정책아래서 자신의 민족성을 부정하고 자기자신에게서 인간적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많은 재일 2세 청년들이 민주화 통일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족성을 확립해나갔습니다.

한통련의 역사- 한민통 결성

72년 10월 유신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을 통해 1인 영구독재를 획책하고 있다고 경고한 김대중씨는, 유신쿠데타를 규탄하는 한편, 해외에서 민주회복과 통일을 위해 운동을 펼쳐나갈 결의를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리하여 재일민주운동의 대표자들과 김대중씨는 서로 손잡고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과 그 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민통 결성 며칠 전에 김대중씨가 KCIA(한국중앙정보부)에 납치된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씨가 암살될 위험과 함께 한민통의 결성에 지장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재일민주운동 진영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김대중씨 구출운동을 펼치는 한편 예정대로 8월 15일 결성선언대회를 열고 한민통의 역사적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한민통의 결성은 한국인의 해외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장거였습니다.

한민통 결성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동포 속에서도 잇달아 운동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한민통이 결성됨으로써 재일한국인은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대변하는 진정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자주·민주·통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민통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는 국내의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그들의 투쟁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의 횡포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민중의 정의로운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민통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김대중씨 구출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매달 재일동포 집회와 시위, 일본정부에 대한 청원운동, 일본시민단체와의 구출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개했습니다.

한민통은 또 재일동포 양심수 구원운동을 가족과 지원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한민통의 활동은 해외동포를 고무하고 77년 8월에 도쿄에서 해외동포운동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한국인 민주운동 대표자회의’를 열고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을 결성했습니다.

한민련의 결성으로 해외민주화운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인터 등 국제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독재정권을 포위하는 국제여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박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80년대에 한민통은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운동, 광주민중학살규탄운동, 군사독재퇴진운동을 강력히 벌였습니다.

한민통은 89년에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이래 한통련이 한 역할 중 특필할 것은 분단고정화 책동을 타파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비약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한통련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그 의의를 널리 홍보 계몽하면서 제일동포의 화합을 위한 갖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통련은 6.15공동위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해 평양과 서울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 8.15민족대축전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한통련의 명예회복문제

78년 제일동포유학생에 대한 간첩혐의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대법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쓰고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국제적인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확산이 두려워, 정적이었던 김대중씨를 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만든 정치적 모략입니다. 그것이 내외민주세력의 단결을 가로막고 해외동포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통련은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활동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국내에서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다음해에는 일본에서도 한통련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대책위를 통해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자유왕래를 위한 운동이 적극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7일, 한통련대책위와 다른 지원단체들이 협력하여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결성되어 9월의 ‘한가위고국방문사업’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은 반성문 제출이나 당국의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것이 2년전 방문 때는 신청한 대표단 전원의 입국이 무조건 인정된 것입니다.

2003년의 고국방문은 직접적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진력과 노무현 정부 당국의 결단과 배려로 실현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통련의 30년에 걸친 운동이 국내외의 광범한 인사들의 지지와 평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한통련, 한청, 민주여성회, 학생협 대표 147명이 한통련고국방문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방문단 대표들은 모두 정식 여권을 받고 입국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김 대통령께서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의 만남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군부독재는 나를 한민통의장으로 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라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무죄판결이 나와 한통련의 누명도 벗겨졌다” “방문단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입국한 것은 여러분의 수십년간의 투쟁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 하셨습니다.

한통련은 올해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대축전에 6.15공동위 공동위원장이신 곽동의 상임 고문과 김정부 의장을 비롯하여 20명의 대표단과 120명으로 구성하는 한통련고국방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제까지 한통련은 정치적 제약으로 재일동포의 민족성 수호와 권익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회복됨으로써 활동공간이 넓혀진 한통련은 앞으로 재일동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통련은 작년 11월에 민단중앙본부에 화합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통련은 민단을 비롯해 재일동포단체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통련은 국내외와 해외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NGO조직들과 함께 손잡고 해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